



전라북도 식품산업 특성과 향후 정책과제

양원탁 부연구위원_산업경제연구부
서환석 부연구위원_산업경제연구부
정미선 전문연구원_산업경제연구부

이 자료는 전북연구원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기반 정책 방향 연구”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1. 전라북도 식품산업 고도화 정책의 필요성

식품산업은 인류의 먹거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산업으로 세계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식품시장은 2017년 기준 6조 4천억 달러에 달하며, 202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국내 식품산업 역시 성장 추이를 보이는데, 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가 2008년 54,689명에서 2017년 60,089개로 9.9% 증가하였으며, 종사자는 2008년 270,602명에서 2017년 346,021명으로 27.9% 증가하였다(전국사업체조사, 2008~2017).

전라북도는 중앙정부 정책에 맞추어 2000년대 중반부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본원(2007), 생물산업진흥원(2010) 등 혁신기관이 이전·설립되었으며, 전략제품 육성을 위한 시군별 출연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나아가,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 국가산단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전문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집적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전라북도의 음식료품 제조업체는 2008년 3,580개에서 2017년 4,159개로 16.2% 증가하였으며, 종사자는 2008년 19,189명에서 2017년 26,585명으로 38.5% 성장하였다.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먼저,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91.4%는 10명 미만 소기업으로 도 지역 수준(89.6%)보다 비중이 크다. 더욱이, 2008년 이후 도내 등록된 식품공장 중 100명 이상 업체는 10개로 시장 영향력을 지닌 업체의 입주는 제한적이다(공장등록현황통계, 2018). 둘째, 식품산업 정책이 신규산업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불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종합적 여건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맞춤형 정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양적·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식품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식품산업 고도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특성을 산업, 입지, 제도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요인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고도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전라북도 식품산업 현황

국내 식품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도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특별·광역시 음식료품 제조업체는 2017년 기준 17,143개(28.5%)로 2008년 대비 4.0% 감소하였으나, 도 지역의 음식료품 제조업체는 2017년 기준 38,787개(71.5%)로 2008년 대비 16.6% 증가하였다.

전라북도 역시 식품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라북도의 음식료품 제조업체는 4,159개로 전국 7.6%를 차지하며, 종사자는 26,585명으로 전국 9.8%에 달한다. 더욱이, 지난 10년(2008~17년)간 식품산업 종사자의 증가율은 38.5%로 도 지역(32.5%)의 성장률보다 6.0% 높다.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기타 식품(38.6%), 도축·육류 가공(26.6%), 곡물 가공(9.6%)의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2017년 종사자 기준). 특히, 도축·육류 가공업은 7,063명(26.6%), 곡물 가공은 2,562명(9.6%)으로 전국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다. 기타 식품제조업의 경우에는 떡류(16.4%), 가공식품(15.2%), 건강보조용 액화 식품(14.0%), 과자·코코아(12.6%), 장류(9.0%) 비중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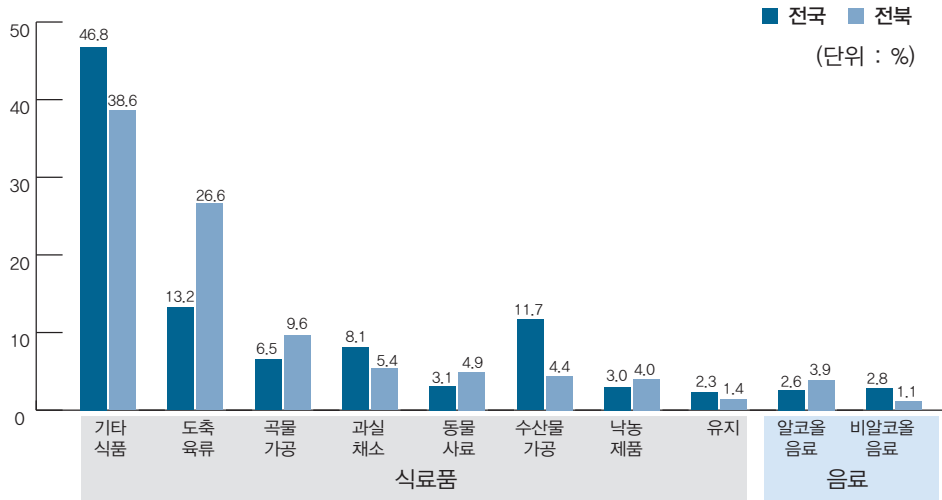
<시도별 음식료품 제조업 변화 추이>

(단위: 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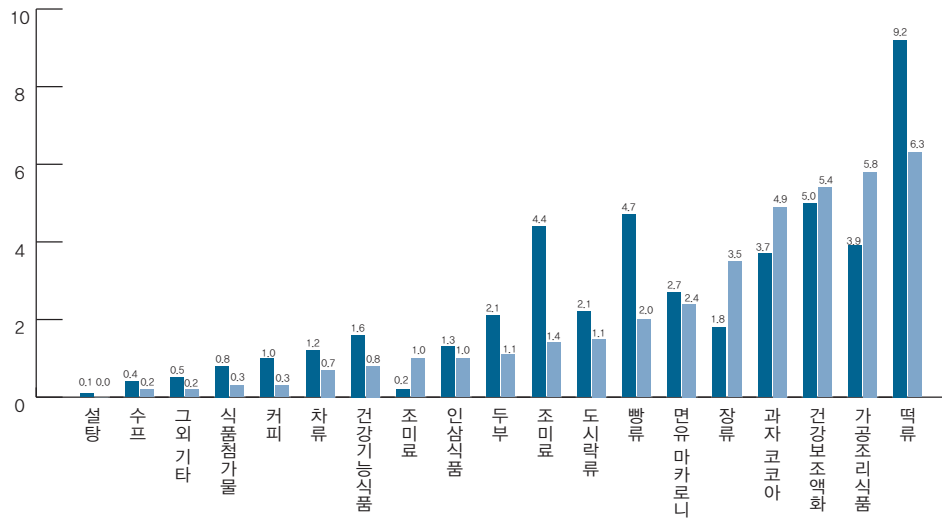
구 분	음식료품 제조업체 수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수		
	2008	2017	증감률	2008	2017	증감률
특별·광역시	17,853(32.6%)	17,143(28.5%)	-4.0	61,357(22.7%)	68,667(19.8%)	11.9
도 지역	36,836(67.4%)	42,946(71.5%)	16.6	209,245(77.3%)	277,354(80.2%)	32.5
전북	3,580(6.6%)	4,159(7.6%)	16.2	19,189(7.1%)	26,585(9.8%)	38.5
전국	54,689(100.0%)	60,089(100.0%)	9.9	270,602(100.0%)	346,021(100.0%)	27.9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8, 2017)

<전북 식품업종별 종사자 비중 소분류 >



<전북 식품업종별 종사자 비중 세세분류(기타)>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8,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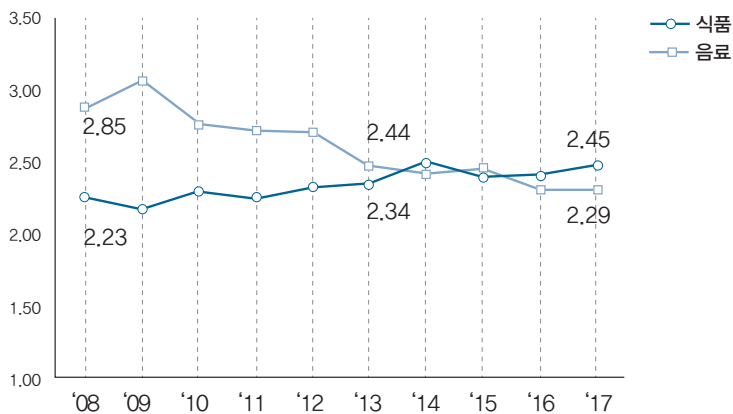
3. 전라북도 식품산업 특성

산업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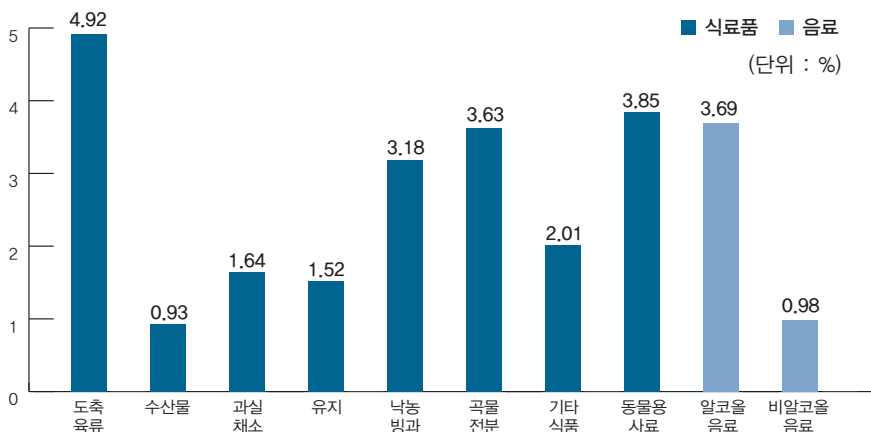
전라북도는 식료품과 음료 제조업 모두 특화산업에 해당하지만, 변화추이는 대조적이다. 식료품 제조업의 특화도(LQ)는 2.45(전국 2위)로 지난 10년(2008~2017)간 성장하는 추이를 나타내지만, 음료 제조업 특화도(LQ)는 2.29(전국 4위) 수준으로 감소 추이를 보인다.

전라북도의 식품산업은 수산물가공과 비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특화도¹⁾가 높고(LQ 1 이상), 도축·육류, 동물용 사료, 알코올음료의 순서로 특화도가 높다. 도축·육류 제조업의 LQ는 4.92로 가장 높으며, 2008년 이후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전북 식품산업의 특화도 변화 추이>



<전북 식품산업의 세부업종별 특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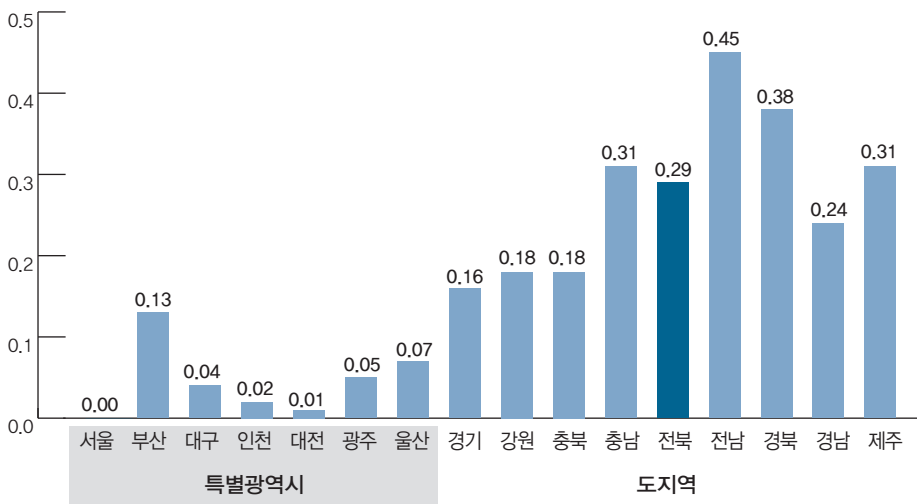
*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8, 2017)

1) 특화도는 업종별 중상자를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LQ지수를 활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해당 수치가 1 이상일 경우 특화산업으로 볼 수 있다(김홍배,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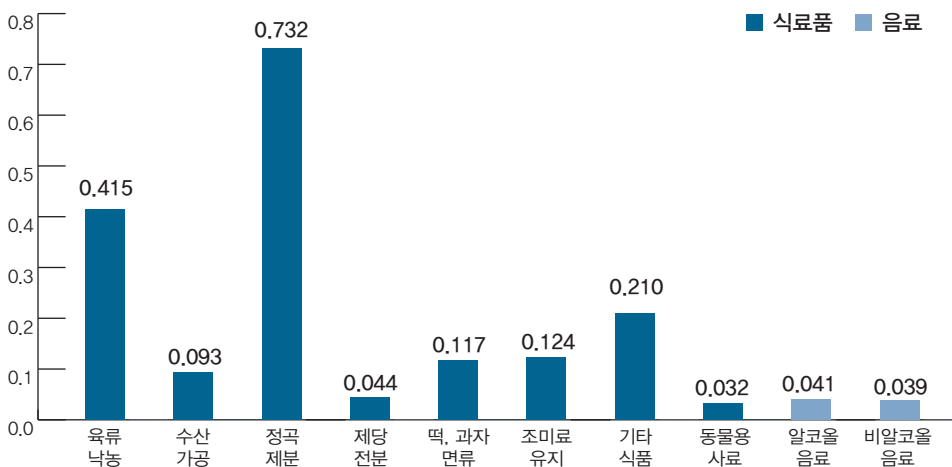
전라북도 식품산업은 농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지역경제 전체 생산유발계수는 전남(1.665), 경북(1.57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반면, 지역농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0.294로 전남(0.445), 경북(0.377), 충남·제주(0.307)에 이어 다섯 번째를 나타낸다.

전북 식품산업의 농업부문 생산유발효과는 업종에 따라 0.032~0.732의 범위를 보이며, 정곡·제분, 육류·낙농 제조업이 생산유발효과가 크다. 정곡·제분의 농업부문 생산유발계수는 0.732로 1단위 생산 증가 시 지역농업의 생산은 0.7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낙농의 지역농업 생산유발계수는 0.415로 두 번째로 크다. 하지만 정곡·제분, 육류·낙농 외에는 농업부문 생산유발효과가 0.3 미만이며, 사료제조업의 경우 높은 특화도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업의 생산유발은 0.03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 시도별 식품산업의 농업부문 생산유발효과 >



< 전북 식품업종별 농업부문 생산유발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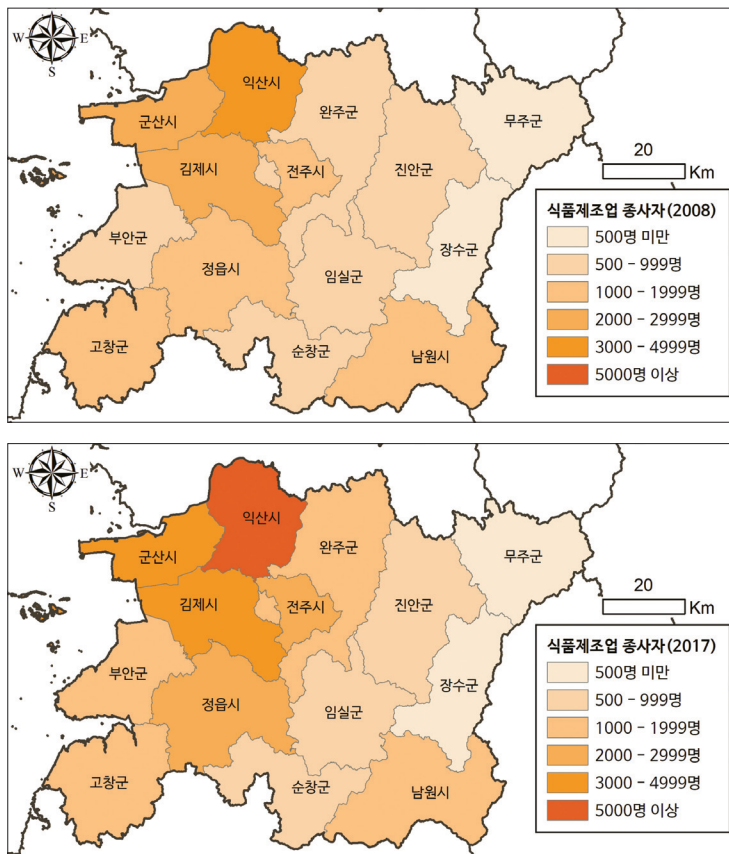


입지적 특성

전라북도의 식품산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 음식료품 제조업의 시군별 종사자 집중도²⁾는 2008년 0.3762에서 2017년 0.421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간적 분포패턴을 살펴보면 식품제조업 관련 인프라가 우수한 익산, 군산, 김제 등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증가하였다.

전북 식품산업은 시군별 농업여건과 주요기업 입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육류 가공업의 경우 축산농가가 밀집해 있고 하림(익산·정읍), 목우촌(김제) 등 주요기업이 위치한 익산(48.8%), 정읍(17.4%), 김제(13.0%)의 비중이 높다. 수산물 가공업은 대형 김 제조업체가 위치한 부안군(41.9%)과 수산물 가공업체가 다수 분포하는 군산시(22.1%)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낙농 제품은 푸르밀과 전략품목(치즈)을 보유한 임실(33.5%)과 매일유업이 위치한 고창군(20.2%)의 비중이 높다. 반면, 곡물·전분은 수입원료 수급 이점을 지닌 군산(24.6%)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주류의 경우에는 하이트진로가 위치한 완주(29.0%)와 롯데 칠성이 위치한 군산(26.6%)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 식품제조업 종사자 분포 변화 추이(2008~2017)>



2) 식품산업의 공간적 집중도는 시군별 전 산업 종사자 비중과 식품산업 종사자 비중을 기준으로 GCR(geometrical concentration ratio)을 산출하였으며, 수치가 클수록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함

<식품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 분포>

(단위: 명, %)

구분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합계
	도축육류	수산물	과실채소	유지	낙농	곡물전분	기타식품	사료	주류	음료	
익산	3,092(43.8)	110(9.4)	190(13.1)	16(4.2)	3(0.3)	313(12.2)	1,454(14.2)	231(17.6)	85(8.1)	18(6.1)	5,512(20.7)
군산	699(9.9)	258(22.1)	122(8.4)	50(13.0)	7(0.7)	630(24.6)	961(9.4)	356(27.2)	278(26.6)	19(6.5)	3,380(12.7)
김제	920(13.0)	5(0.4)	66(4.6)	93(24.2)	139(13.2)	293(11.4)	1,455(14.2)	231(17.6)	7(0.7)	10(3.4)	3,219(12.1)
정읍	1,230(17.4)	33(2.8)	151(10.4)	82(21.3)	123(11.6)	159(6.2)	716(7.0)	311(23.7)	31(3.0)	58(19.7)	2,894(10.9)
전주	101(1.4)	33(2.8)	73(5.1)	53(13.8)	44(4.2)	150(5.9)	1,468(14.3)	29(2.2)	99(9.5)	6(2)	2,056(7.7)
부안	645(9.1)	490(41.9)	8(0.6)	6(1.6)	0(0)	314(12.3)	463(4.5)	5(0.4)	33(3.2)	3(1)	1,967(7.4)
남원	101(1.4)	43(3.7)	78(5.4)	25(6.5)	9(0.9)	189(7.4)	816(8.0)	13(1)	41(3.9)	57(19.4)	1,372(5.2)
완주	91(1.3)	26(2.2)	139(9.6)	21(5.5)	0(0)	77(3.0)	655(6.4)	21(1.6)	304(29.0)	30(10.2)	1,364(5.1)
고창	6(0.1)	140(12.0)	158(10.9)	14(3.6)	214(20.2)	166(6.5)	419(4.1)	30(2.3)	80(7.6)	30(10.2)	1,257(4.7)
순창	27(0.4)	5(0.4)	91(6.3)	6(1.6)	60(5.7)	79(3.1)	649(6.3)	9(0.7)	15(1.4)	44(15)	985(3.7)
임실	0(0)	22(1.9)	111(7.7)	5(1.3)	354(33.5)	67(2.6)	371(3.6)	17(1.3)	7(0.7)	0(0)	954(3.6)
진안	34(0.5)	0(0.0)	123(8.5)	5(1.3)	3(0.3)	45(1.8)	552(5.4)	0(0.0)	25(2.4)	0(0.0)	787(3.0)
무주	10(0.1)	2(0.2)	77(5.3)	2(0.5)	101(9.6)	38(1.5)	157(1.5)	0(0)	28(2.7)	19(6.5)	434(1.6)
장수	103(1.5)	3(0.3)	58(4.0)	7(1.8)	0(0)	42(1.6)	117(1.1)	58(4.4)	16(1.3)	0(0)	404(1.5)
합계	7,059(100)	1,170(100)	1,445(100)	385(100)	1,057(100)	2,562(100)	10,253(100)	1,311(100)	1,049(100)	294(100)	26,58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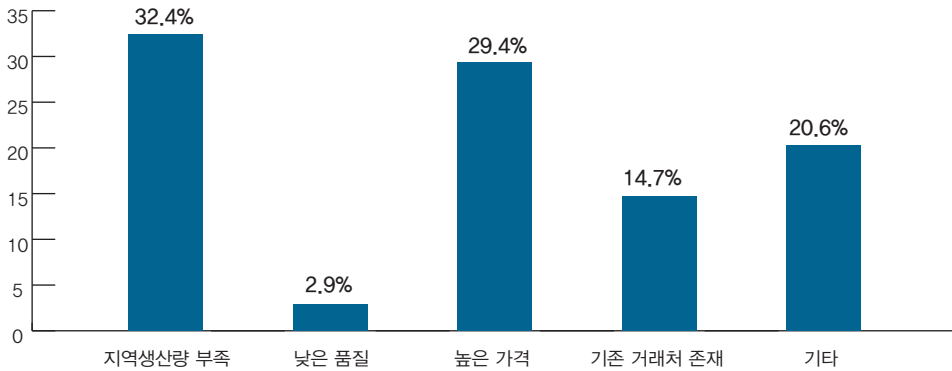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2017)」

제도적 특성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농업 연계 발전을 위해 지역 원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주요 식품단지 입주기업 67개를 대상으로 지역 원료의 이용비율을 조사한 결과³⁾, 응답자의 53.5%는 지역 원료 이용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역 원료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19%는 지역 원료 이용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 원료의 이용비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지역 생산량 부족(32.4%)', '높은 가격(29.4%)'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가공용 농산물 생산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 수요조사는 전라북도 내 식품특화 또는 주요 식품업체가 입주한 10개 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소성특화, 신용전문, 복분자특화, 홍삼한방, 진안2, 가남, 인계, 부안2, 무주 등)에 입주한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12월 16일부터 30일간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

<지역 원료 투입비율이 낮은 이유(중복응답)>



자료: 양원탁 외(2020),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기반 정책 방향 연구

전라북도의 식품기업 유치 측면의 주된 장점은 저렴한 용지 가격(33.9%), 풍부한 기업지원제도(15.3%), 우수한 자연환경(11.9%)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의 단점은 인력 부족(27.4%), 기업지원 부족(22.6%), 수도권 접근성 부족(15.3%)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지원제도의 경우 장점과 단점 모두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업의 수요에 맞는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매칭 강화와 중장기적으로 근무·정주여건이 동반된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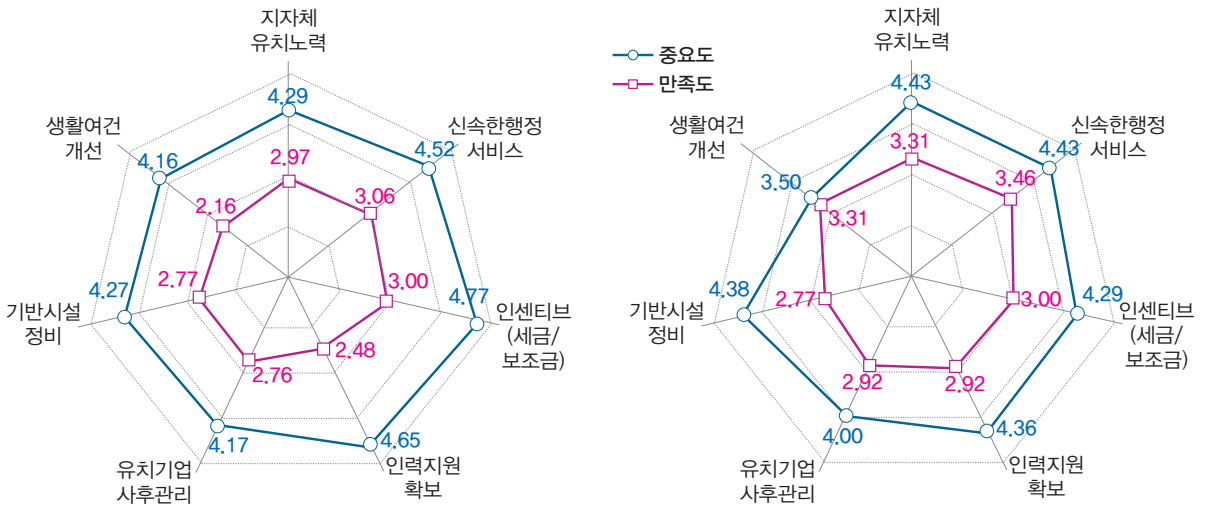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식품기업 유치 측면의 장단점>

구분	식품기업 유치 측면의 장점	식품기업 유치 측면의 단점
1위	저렴한 용지가격 (20개 업체, 33.9%)	인력 부족 (34개 업체, 27.4%)
2위	풍부한 기업지원제도 (9개 업체, 15.3%)	기업지원 부족 (28개 업체, 22.6%)
3위	우수한 자연환경 (7개 업체, 11.9%)	수도권 접근성 부족 (19개 업체, 15.3%)

자료: 양원탁 외(2020),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기반 정책 방향 연구

전북의 식품기업 유치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0명 미만의 소기업은 인센티브와 인력확보 지원정책에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 50명 이상 업체는 기반시설 정비와 인력 확보 지원에 대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력 매칭 지원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필요하지만, 초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소기업은 기업지원 인센티브 확대가, 대기업의 경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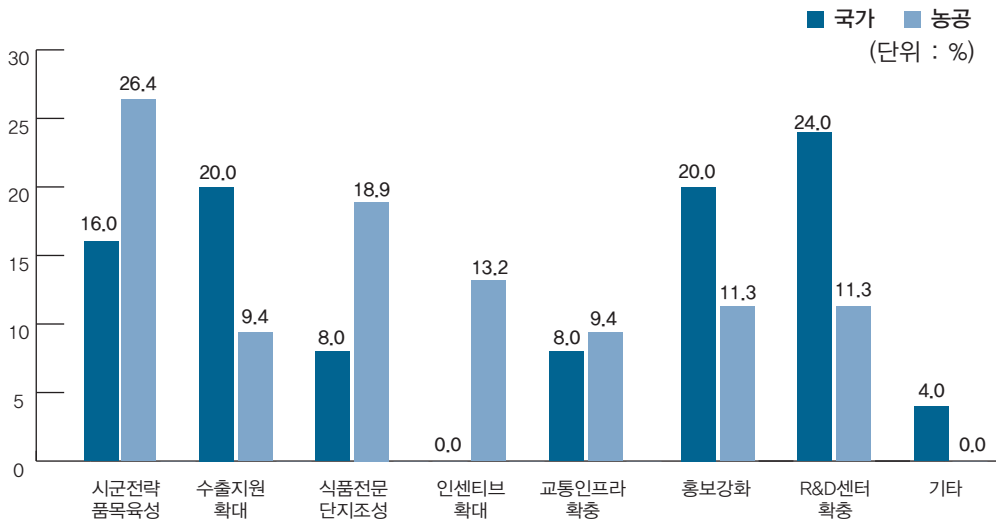
<식품기업 유치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좌: 10명 미만, 우: 50명 이상)>



자료: 양원탁 외(2020),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기반 정책 방향 연구

전북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소재와 전처리업체의 전략적 유치가 필요하며,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유치업종의 경우 식품소재(50.7%), 전처리업체(23.9%)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식품기업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R&D 센터 확충(24.0%), 수출 지원·홍보 강화(20.0%)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지만, 농공단지에는 시군 전략품목 육성(26.4%), 식품 전문단지 조성(18.9%)의 순서로 정책적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식품산업 유치 활성화 방향(유형별)>



자료: 양원탁 외(2020),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기반 정책 방향 연구

4. 전라북도 식품산업 고도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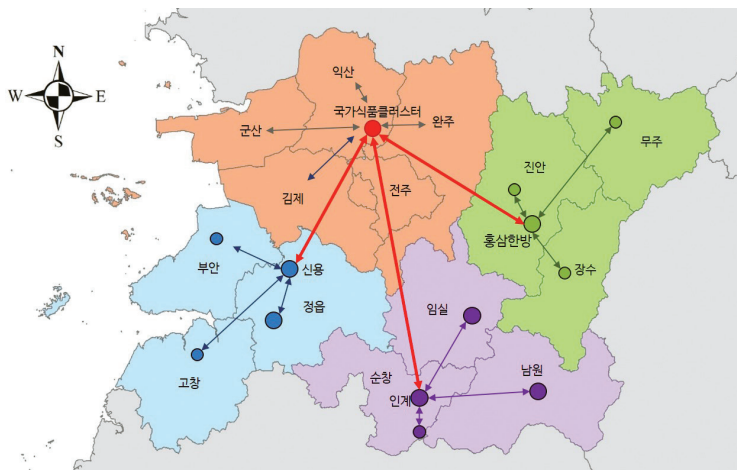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업 측면에서는 전북도-시군, 식품기업-지역농업 간 상생발전이 필요하다. 첫째, 권역별 연계발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식품산업 집적화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군별, 단지별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혁신기관이 집적된 거점(익산·전주·완주·군산)과 연계 권역(고창·정읍·부안, 무주·진안·장수, 남원·임실·순창)을 설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식품단지 및 지자체연구소를 중심으로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전북의 식품기업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기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농업과 상생발전을 위해 생산자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 원료 활용의 주된 애로사항은 높은 가격과 생산량이므로 지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원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 농업 생산유발효과가 큰 육류·낙농 곡류·제분과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에 대해서는 조직화와 공동생산 및 출하를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식품기업은 지역 원료를 우선적 사용하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전북 식품기업의 주된 단점인 인력수급 문제에 대응하여 식품산업의 인력구조를 반영하여 생산기술 인력과 전문 인력으로 구분하여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생산기술 인력의 수요는 많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4개 권역별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와 연계하여 1전문대·특성화고-1시군 취업연계형 기능인력 양성 지원하여 생산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식품산업 네트워크 체계 구축안>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전라북도는 수도권 접근성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과 일부 농공단지의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가 필요하다. 먼저, 시군별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브랜드가 강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연구소와 연계하여 고도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브랜드가 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전략 제품 발굴 및 제품화를 지원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식품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입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신규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근로자 지원·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단지별 특성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정비·확충(진안홍삼, 고창복분자 등) 또는 노후기반시설 정비(가남 등)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전문·특화단지(권역별 거점)를 중심으로 물류 시설 확충 및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체적인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중소 식품기업의 조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협력·지원체계 강화

전라북도의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맞춤형 식품산업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시군(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식품기업 간 긴밀한 협력·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전북도-시군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전북-시군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협력체계 내에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식품기업 유치 경쟁 해소를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고도화 정책 방향에 대한 공동의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품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다양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제도를 지니고 있지만, 이미 유치된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미 유치된 식품기업이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권역별 혁신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 투자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식품산업 고도화 정책 방향>

구 분	목표	전북 여건 종합(정책요인 도출)		정책 방향
		장점	단점	
산업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 높은 성장률	특정 지역 집중 증가	클러스터 상생협력 강화 지역농업 상생발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산학연계 인력양성 시군 특화품목 고도화 유통·물류경쟁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전북-시군-식품산업 협력체계 강화 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
		총 생산유발효과 큼	농업 파급효과 낮음	
		육류·낙농·곡물 특화	소기업 비중 높음	
		공공 혁신역량 우수	민간 인력 부족	
입지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별 특화 브랜드	전략품목 부재 지역	유동·물류경쟁력 확보 기반시설 확충
		· 저렴한 용지가격 · 우수한 자연환경	· 수도권 접근성 부족 · 물류비용 부담	
		식품 전문단지 조성	단지 인프라 부족	
제도	협력·지원 체계강화	우수한 인센티브 제도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	협력체계 구축 어려움 인센티브 협의 필요	전북-시군-식품산업 협력체계 강화 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
		우수한 기업유치 실적	사후관리 어려움	

<참고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세계식품시장 동향.
- 통계청(2008~2017), 전국사업체조사.
- 한국은행(2013), 지역산업연관표.
- 김홍배(2005),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 한국산업단지공단(2018), 전국공장등록현황.

